

“전세계는 챗GPT 규제 논의 중... 국가별 온도차 분명”

(현황) 일본에서 개최한 G7 회의에서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 공감

-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분야의 핵심기술인 생성형 AI 기술과 몰입형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 확대를 위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일환으로 각국 담당 장관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해 연말까지 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함
 - 기시다 일본 총리는 G7 회의에서 ‘인간 중심의 신뢰성 있는 AI’ 실현을 위해서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 (DFFT: Data Free Flow with Trust)’의 중요성을 강조함
- 4월 말 개최된 G7 디지털 및 기술 담당자 회의에서 AI 개발에 관한 5대 원칙에 합의
 - 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G7 디지털 관련 분야 담당자들은 AI 개발을 위한 5대 원칙으로 ‘법의 지배, 적절한 절차, 혁신 기회의 활용, 민주주의, 인권존중’이라는 큰 틀에 합의함
 - 기본적으로 5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규제 차이를 고려하여 AI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측정하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각국 현황) G7의 회의에서 AI 기술에 대한 각국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관련 규제를 논의하였으며, 양성평등, 사생활 보호, 개인의 존엄 등과 같은 가치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법안을 심사 중임
- (미·일) 미국과 일본은 AI 규제에 소극적이라 평가됐으나, 최근 챗GPT의 확산과 중국 견제를 위해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선회
 - 미국에서는 챗GPT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요구 움직임이 있었고, 사회적 명사들이 포함된 비영리 단체에서는 최소 6개월간의 AI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가 있었음
- (그 외 국가) 이란·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의 나라 등에서는 지난해 11월 챗GPT 사용을 금지
 -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 최초로 이탈리아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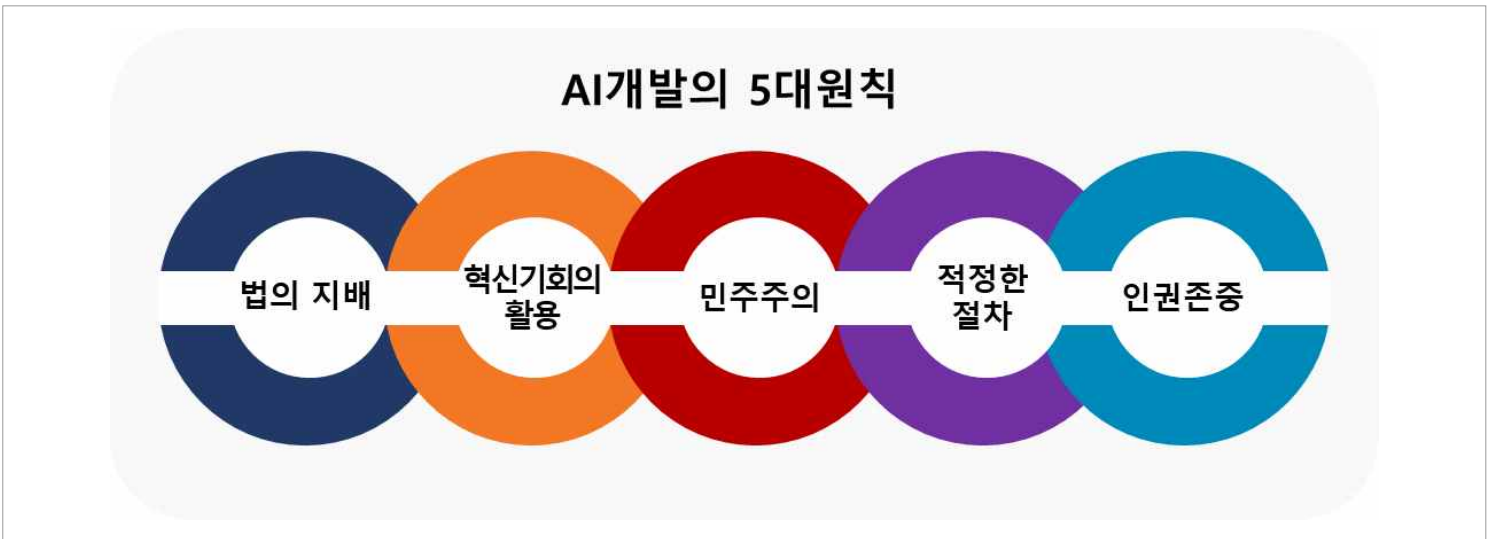
(위험) AI 기술을 통한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국제 규칙 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 5월 중순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 AI 기술 관련 청문회 실시
- 챗GPT 창시자라고 불리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청문회에서 AI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
 - 샘 올트먼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AI 기술을 통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함
 - 유권자에게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기 위해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함
 - 또한, AI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정부 기관 설립을 주장하였고,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함
-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AI 관련 규제에 대한 대책이 다른 나라들에 미흡하며, 규제를 비롯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
- 국내 정치권에서도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AI 기술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 제기

(정책제언) 경기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AI 기술과 챗GPT에 대한 규제 관련 논의 필요

-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에서 道 차원의 AI 기술 및 챗GPT에 관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
- 디지털 대전환 및 AI 기술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CDO(Chief Digital Officer) 임명을 통한 명확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AI 기술 및 챗 GPT에 관한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규제 마련 노력 필요
- AI 기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직 우려 및 디지털 소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정책 마련 필요

| 주요 7개국 디지털·기술 장관들이 합의한 AI 기술 관련 5대 원칙 |



자료: “G7 ‘챗GPT 사용에 책임부여’ 원칙 합의.. 규제는 온도차”, 한겨레(2023.05.01.).

| AI 기술 및 챗GPT에 관한 우려 목소리 |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마이클 슈워츠 (MS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럴 M 웨스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
내용	“내년 미 대선에서 AI를 활용한 여론 조작이나 거짓 정보 유포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AI는 선거 조작 세력 등에 의해 가까운 시일 안에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누구나 정치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어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면 거짓 정보를 퍼뜨릴 유인을 가질 수 있다.”	“AI가 정치 연설문을 작성해 2028년 미 대선은 더이상 사람이 주도하지 않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출처	5월 16일 미국 상원 청문회	5월 3일 세계경제포럼 토론	5월 3일 브루킹스 연구소 논평	3월 뉴욕타임스 공동 칼럼

자료: “AI, 美대선 조작 위험”... ‘챗GPT 아버지’의 경고“, 동아일보(2023.05.18.).